

이상현, 오수~남원 국도 조기개통 촉구

2009년 착공 현 공정을 80%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총 76건
역주행 위험 높아
교통안전시설 확충
조기개통 적극 건의 필요

높은 교통사고율로 악명이 높은 오수~남원 국도의 조기개통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남원1)은 전북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실 오수~남원 월라구간 국도 17호선 공사가 2009년 착공 이후 무려 8년이 지나도록 공정이 8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계획된 사업기간은 2018년 12월까지지만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면 이마저도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작공 8년째 지지부진한 공사 진행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국도 17호선 오수~남원 구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인용해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총 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자 7명, 부상자가 156



이상현 의원



누리과정 공약마저 안지켰으니 해야하야를 촉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어린이집총연합회는 17일 국회에서 "본인의 무상보육 누리과정 대선공약마저 지키지 않고 내팽개친 무책임하고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의 현정유리사태를 규탄하며 하

명 발생했다"면서 "도는 도민들이 이런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 해당도로에서는 2011년 총 16건의 사고로 사망 3명 부상 33명이 발생했

어 2012년은 15건 중 사망 2명 부상 31명, 2013년은 18건 중 사망 1명 부상 34명, 2014년은 9건 중 부상 19명, 2015은 18건 중 사망 1명 부상 39명 등 죽음의 도로라는 악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상현 의원은 "오수~남원 구간에 도로 구조상 초행자들의 역주행사고가 많은 편

인만큼 도는 교통안전시설을 눈에 잘 띄게, 곳곳에, 크게 표시 해야된다"면서 "특히 앞으로 안전시설의 전폭적 확충과 함께 조기개통 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고민형 기자

'대통령 퇴진' 촉구 규탄대회 민주당 전북도당, 19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오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연다.

1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는 19일 전주 오거리광장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규탄대회에는 각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 진실 규명 및 검찰의 영점 수사를 촉구하고, 촛불 집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김춘진 도당 위원장은 "이번 규탄대회는 도민들의 요구인 대통령 퇴진과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자리이다"며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버티는 대통령, 특권 뒤에 숨어 혜택 누리"

외투수에 물린 검찰... 혐의 모두 공개하는 식의 '저항' 가능성도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법조계 인파에서 "특권 뒤에 숨었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최순실(60·구속)씨 구속기간 만료일인 20일이 다가오고 있어 검찰은 다급한 형편이다. 이를 잘 아는 박 대통령이 검찰을 '외투수'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7일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특권 때문에 검찰이 외투수에 물렸다. 현재로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신분상 특권 뒤에 숨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애초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닌가"라며 "최씨 구속 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지난 15일 "대통령 직무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돼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애기한 헌법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그런 헌법 정신이 있다면 이는 위헌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을 압박할 뚜렷한 수단 없는 검찰은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수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등을 발부 받아 집행하지만,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절차를 밟기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아무리 국민적 공분을 사는 처지라 하더라도 현직 국가원수 신분이라 예우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일각에서는 참고인 소환장을 보내는 방법 등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

는게 법조계 평가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의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여론을 통해 청와대를 압박하는 효과는 볼 수 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참고인 신분 소환장을 보내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여론전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실효성 없는 방법을 검찰이 굳이 택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 조사 없이 공소장을 작성할 경우 진술 증거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 등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참고인 중 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최씨를 우선 기소한 뒤 추후 변경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박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공개해 버리는 식의 '저항'에 나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한 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 공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다.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 혐의를 다 쓰고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친박 "해당행위" VS 비박 "너나 잘해"

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가 17일 상대 계파를 향해 서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친박계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비박계 수장 김무성 전 대표가 당내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시킨 데 대해 "비상시국회의는 분명한 해당행위로 즉각 중단하라"며 "그 중심에는 김무성 전 대표께서 계신데 순수성과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조 최고위원은 "시국회의에서 황영철 의원은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면 시국회의는 중단한다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잠룡, 시도지사 몇 사람이 모여서 겨우 시국회의를 구성한 목표가 이 대표 사퇴라는 것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비박계를 비난했다.

이정현 대표는 "새누리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들을 그분들이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안도 없이 무조건 이정현 물러나라고 한다면 모든 책임은 이제 그분들에게 있다"며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비박계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비박계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많은 건강한 보수세력들이 당을 떠나가고, 지지를 철회하는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 그 책임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야말로 해당행위자"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이어 "비상시국회의는 건강한 보수세력을 끌어안고 당을 새로 쇄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구당, 구국의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사퇴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당 쇄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다"고 거듭 '친박 지도부' 퇴진을 요구했다.

강석호 전 최고위원도 본회의에 참석하며 친박계의 '해당행위' 발언에 대해 "그런 얘기는 자제해주는게 낫다"며 "우리는 해당행위를 한 적이 없다. 약속을 어긴 것은 그쪽이다. 그래서 내가 최고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로드맵 제시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로드맵을 벌써 했다. 지도부는 사퇴하고 비대위를 꾸려서 그 다음에 당의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당을 해체하는 수준까지 가서 이런 로드맵은 벌써 던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시스

문재인, 엘시티 연루설 유포자 고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설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유포자들을 고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엘시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인터넷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십달단이나 댓글부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런 식의 흑색선전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하고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은 "이후에도 인터넷과 SNS상의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BUAN 600th Anniversary
1416-2016
부안으로 마실 오세요
扶來滿福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